

2차 전북특자도법 개정 첫 단계 돌입

“총선 공약·정책 준비 최선”

도, 2단계 특례사업 발굴 추진단 첫 기획 회의 핵심산업별 현장·단체 간담회 통해 의견 수렴

전북도는 1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2단계 특례사업 발굴 추진단 첫 기획 회의(kick off)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기획회의에는 2단계 특례사업 발굴 추진단으로 구성된 전북연구원 및 10개 출연기관의 전문가와 실국 주무관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전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신속한 2차 전북특별자치도법 개정을 위해 2단계 특례사업 발굴 추진단을 구성하고 첫 기획회의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1단계 특례발굴 시 나타났던 문제점 보완 및 개선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1단계 특례발굴에서 부족했던 분야별 통합 특례와 민간분야 참여 부분에 대한 추진단의 의견을 수렴해, 2단계 특례발굴은 핵심산업별 현장 및 단체 간담회를 통한 다양한 의견을 종합, 통합 인허가 의제 및 규제개선 과제 등을 발굴할 계획이다.

2단계 특례사업 발굴 추진단은 11월부터 본격적으로 2단계 특례를 발굴하고, 2024년 상반기 2차 전북특별자치도법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한편, 232개 조문을 담은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은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상정에 이어 공청회, 상임위 심사 등을 앞두고 있다.



전북도는 1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2단계 특례사업 발굴 추진단 첫 기획 회의(kick off)를 개최했다.

민선식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1단계 특례발굴 시 부족한 부분과 2단계 특례발굴과 관련된 중요한 논의를 진행했다”며,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2단계 특례는 전북의 자치권 및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는 핵심분야 산업현장과 밀접하게 연계된 특례들을 더 발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훈기자

민주 김성주 의원, 총선거획단 관련직 위원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 부의장인 김성주 의원(전주 병)이 제22대 총선거획단에 1일 임명됐다.

이날 민주당은 조정식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총선거획단 명단 13명을 발표했다.

총선거획단은 내년 총선에 임하는 민주당의 지향과 큰 틀의 방향을 논의하고 민주당의 비전과 책임 그리고 경제와 민생 회복을 위한 정책 방향 등을 제시한다.



김성주 의원은 “민생 회복을 위한 내년 총선 민주당 공약과 정책 준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총선거획단 관련직 위원은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비롯해 △정태호 민주당연구원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 △김병기 수석사무총장 △한준호 홍보위원장 △이재정 전국여성위원장 △전용기 전국청년위원장 이다. 일반 위원은 △신현형 의원 △최태용 부산시장 지역위원장 △박영훈 청년미래연석회의 부의장 △장현주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 △장윤미 변호사다. /김재훈 기자



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열린 특별자치시도의회 의정박람회 행사로 마련된 지방분권 토크 콘서트 '특별자치시·도의 의정에 듣는다'에서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 등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전북도의회 제공)

“지방분권 핵심, 재정분권·중앙 권한이양”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 제주특자도 지방분권 토크 콘서트서 “특자도 성공 위해 세종·강원 등 4개 특자시·도 공조 필요”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은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과 중앙 권한의 지방이양”이라며, “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4개 특례시·도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주영은 의장은 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열린 특별자치시도의회 의정박람회 행사로 마련된 지방분권 토크 콘서트 특별자치시·도 의정에 듣는다에 참석해 이같이 강조했다.

국주 의장은 “대한민국 새로운 성장 동력인 지방분권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방의 자율성과 함께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며 “중앙의 권한과 재정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 지역 실정에 맞는 전략산업을 제대로 키우고 정책 역시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권한이양에 대한 거부감과 타지방과의 형평성 및 특례에 따른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부정적

의견이 높다”고 지적했다.

국주 의장은 “혼자라면 빨리가고, 함께 가면 멀리간다”는 격언처럼 특별자치도의 미래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주·세종·강원·전북 4곳이 분쳐 경험과 성과를 공유해야 한다”며 “정부가 책임있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실행하도록 시·도의회도 역할을 모아야겠다”고 강조했다.

제주·세종·강원·전북도의회는 이날 ‘특별자치시도의회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김재훈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민주 김의겸 의원

전보BLS 군산공장 방문

김의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달 31일 시범운영기간 중 가스누출이 발생한 이후 운영이 중단되었던 전보BLS군산공장을 방문했다.

전보BLS는 지난 5~6월에 발행했던 설비 관련 가스누출 사고로 새만금 신공장 가동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이다.

김 의원의 이번 현장방문은 전보BLS 김형준 CEO, 임원진과의 간담회, 그리고 현장 안전상태 점검 등을 확인하고, 생산 가동을 위한 준비 상태와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전보BLS는 5월과 6월 발생한 두 건의 사고에 대한 안전대책과 사고예방에 대한 향후 대책, 그리고 생산을 위한 준비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군산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한 전보BLS는 2차전 지분자 중에서 전해질부분의 큰 축을 담당할 강소기업임을 강조했다. 또한 향후 재가동을 목표로 필요한 지원대책과 사고예방, 그리고 신속한 대응을 위한 화학산업 안전·관리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공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차전지 특화단지 추진에 대한 전북도와 군산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단순한 기업유치에서 이차전지 산업의 메카가 되도록 기업들이 정착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군산=김관근 기자



고향사랑기부 활성화 방안 모색

오현숙 도의원, 도의회서 정책 세미나 개최 핵심 담례품 마련·기금 활용 방안 고민 등 제안돼

전북도의회 지방자치발전연구회 오현숙 대표의원(정의당, 비례)은 1일 전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라북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박지호 희망제작소 부연구위원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회의 좌장은 임성진 전주대학교 교수가 맡고, 이어 전영욱 군산대학교, 방상윤 전라북도 자치행정과장, 김동영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전라북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1일 전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북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사진=전북도의회 제공)

에 대해 토론했다.

발제를 맡은 박지호 부연구위원은 “지자체의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핵심 담례품 등을 마련하며 담례품을 강조하기보다 기금의 활용을 더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또는 사업 개발 기금의 활용이 지역의 다양한 주체에 돌아갈 수 있는 토대 구축, 타 기금 또는 사업과의 지속적이고도 효과적인 연계 방안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를 제안했다.

방상윤 도 자치행정과장은 “올해 1월 1일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초기 중앙부처, 전국 지자체 및 관련기관이 함께 열심히 노력해 주신 덕에 많은 국민들이 기부

에 동참하고 있다”며, “차별화된 사업발굴 및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해 전문가 자문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지속적으로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제안했다. /김재훈기자

전영욱 교수는 “현행 제도 안에서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현실적 방안이 대해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낮은 인식을 홍보수단 규제로 기부 금액이 감소하므로 이 부분부터 먼저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동영 연구위원은 “중간 지원조직 신설을 통한 전문성과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별 랜덤을 통한 차별화된 담례품 및 지정기부제 도입을 대비한 맞춤형 사업발굴 등 민간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방자치발전연구회 오현숙 대표 의원은 “오늘 열린 정책 세미나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례와 제도적 효과를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여러 전문가가 제시하신 다양한 의견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전라북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훈기자

2023. 1. 1 시행

순창 고향사랑 기부제

축! 전주매일 창간

순창 고향사랑 기부 어렵지 않아요!

누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순창이 아닌 국민 누구나	어떻게?	온라인 : 검색창에 “고향사랑 e음” 오프라인 : 농축협 및 농협은행
얼마나?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 (법인 기부 불가)	기부혜택은	세액공제 + 담례품
언제?	2023. 1. 1 부터	뭘하는데?	지역민의 복리증진 사업 추진

순창군 담례품은!

농축산물 쌀, 농특산물꾸러미, 옥광밤, 딸기, 블루베리, 두릅, 양봉, 화분, 쌈채소

가공식품 순창고추장, 된장, 간장, 청국장, 수제한과, 강정, 참두루 장아찌, 나물밥키트, 청국장집

서비스(상품권 등) 순창사랑상품권, 별초대행서비스 이용권, 권역 숙박시설 이용권, 장내 미생물 검사키트, 실랜드 방갈로 숙박권

내 고향을 사랑하는 가장 쉬운 방법, 순창 고향사랑 기부로 함께해 주세요!

지역생산자
이촌 소독 겸대
역경영력 강화

기부자
세액공제
담례품

지방자치단체
지방재정 확충
주민배려 증진사업

NH 농협

농협중앙회순창군지부장 **이병희**
순창농업협동조합장 **김성철**
동계농업협동조합장 **양준섭**
구림농업협동조합장 **김승용**
서순창농협협동조합장 **설득환**